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촉구 결의문

- 국토해양부 및 인천시에 대하여 -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경인고속도로는 1968. 12. 21개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통당시 우리 인천은 인구가 약 60만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300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도시의 발전과 수도권역의 광역화로 우리 인천은 현재 동서방향 4개축, 남북방향 2개축의 고속도로 기능을 구축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그간 서울과 인천간의 물류이동과 교통의 증추기능을 담당하였으나 경인고속도로의 직선화와 더불어 고속도로의 대폭적인 확충에 따라 서인천 IC~용현동 구간은 도로 기능을 시급히 조정해야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인천항을 기점으로 하는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의 기능 재배치와 친수항만으로의 전환, 화물차량의 통행 감소로 고속도로의 존치는 의미가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의 중요 도심을 양분하고 있고 주변에 대규모 주택단지들이 구도심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높은 철제 방음벽의 설치로 도시가 단절되고 주민들 간의 소통을 막고 도시경관과 재산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1997. 6. 30일 인천 도시기본계획 승인과정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직선화하면서 서인천 IC~용현동 구간을 남북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 기능을 변경 승인하였으며 그간 수 차례의 도시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도 동 계획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인천시는 인천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도록 서인천 IC부터 인천항 구간의 고속국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30일 서인천 IC부터 가좌 IC 구간은 4차선 규모로 지하화하고 가좌 IC부터 인천항 인근 경인고속도로 시점까지 지상고속도로로 운영하며 지하화하는 사업비는 전액 인천시가 부담하는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의 가장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로정책을 모순되게 관리하면서 인천시 도시계획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인천시는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르게 고속도로는 그대로 존속하는 협약에 동의하는 한편, 막대한 도로구조 변경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중요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의회의 동의나 시민들의 합의를 구하지 않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인천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경인 고속도로 서인천 IC~용현동 구간의 관리권 이관을 조속히 이행하고 인천항의 물동량을 분담하기 위하여 제2외곽 순환 도로가 조기 건설되도록 협조해야 하며, 인천시도 동 구간의 관리권을 조속히 이관받고 물류이동과 교통소통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더불어 최선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서인천 IC~용현동 구간의 관리권 이관에 대하여는 정부가 승인한 도시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의 후속 절차임을 감안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 신뢰 측면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동 문제를 조속히 해소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와 인천시에 재차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 I. 2009. 4. 30일 국토해양부와 인천시가 협약한 문건은 국토해양부가 승인한 인천도시기본계획의 도로계획과는 상반되는 모순된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에 대하여

시의회와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기관장이 아닌 실무자간에 작성된 합의서이므로 원천 무효임을 밝힌다.

I.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용현동 구간은 도시를 양분하고 주민간의 소통 저해와 도시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주변이 대부분 구도심 지역으로 구도심 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인 바, 동 구간의 고속국도 폐지는 경제수도를 지향하는 인천의 도시경쟁력의 강화와 27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제중심 도로로의 개발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997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인천도시기본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용현동 구간의 고속국도 폐지와 관리권 이관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I. 1968년도에 건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경인고속도로는 그간 막대한 통행료 수입을 올리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의 지역적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되는 등 기형적 운영과 소음, 분진, 진동, 도시단절 등의 환경 문제에 대하여는 매우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정부에서는 경인고속도로의 직선화 추진과 병행하여 서인천IC~용현동 구간의 간선화에 따른 주변 시가지 정비와 도로 구조 개선에 따르는 국고 지원에 적극 나서야한다.

2010. 7. 16.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